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9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윤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봉준, 이숙자, 이종환, 최민규, 황철규 의원(23명)

1. 주문

- 정부와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심의·의결하고, 특별감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상의 문제들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고 있음.

-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167회의 경력경쟁 채용 중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동의’라는 법적 근거 없는 임용 처리, 서류전형 과정의 형평성 위반 등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절차적 부정이 확인되었음.
- 그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고, 특별감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감사원법」 등

4. 이송처

- 국회,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가장 앞에서 수호해야 할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상의 문제들은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짓밟고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 중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021~2022년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동의’라는 법적 근거 없는 임용 처리, 서류전형 과정의 형평성 위반 등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절차적 부정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선관위는 외부의 견제 없이 비리를 반복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실력 대신 연줄과 특혜가 작용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부패한 구조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를 강력히 감시할 독립적인 특

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핵심적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불공정한 운영이 계속될 것이며, 청년들의 좌절과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동 법률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 또한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특별감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